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6.10.01 시행)>

[1]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정답> ③

해설>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서비스의 융합 및 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말한다. 스마트 정부는 결국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 government) 내지는 정부3.0(Government 3.0)을 의미한다.

③ [X]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중시한다. 특히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스마트 정부에서의 행정 서비스 변화>

구분	기준	기존 (전자)정부	스마트 (전자)정부
수요자 (국민)	접근방법	정부가 정한 방식(이용 시간 제한/ 지정된 처리 관서), PC만 가능	내가 원하는 방식(24시간, 지역 무관, 매체 다양),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매체
	관공서이용 (민원 신청)	여러 번 방문 개별 신청(관청 또는 인터넷), 동일 서류도 필요시 복수 제출	1회 방문,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수혜방식 (지원금복지 등)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신청 필요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서비스방식	국민 중심 서비스(보편적),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인 중심 서비스(맞춤형), 공공정부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공무원	근무위치	사무실(PC 기반)	위치 무관(스마트 워크센터, 모바일 서비스)
	현장근무 일하는 방식 (재난안전 등)	기록은 본부(사무실)에서 재난·안전 등 사후 복구 위주	현장에서 실시간 기록·관리 재난·안전 등 사전 예측 및 예방
	소통창구	통합창구 (해당기관에 중계·배포)	통합창구 (직접 접수)
국민과 소통	정책반영	통계적·종합적 반영	선별적 직접 반영
	소통방식	단방향(국민 → 정부)	양방향(정책반영결과 등 회신)

▶ 2017 비전행정학 p.705

[2]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정답> ①

해설> ① [X]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던 것은 적

슨(Jackson)이었다. 제7대 대통령 잭슨(Jackson)은 민주주의의 실천적 원리구현을 위하여 공직교체와 공직개방을 골자로 하는 엽관주의를 도입하였다. 귀족중심의 관직점용 타파를 주장하면서 충성심이나 당파성을 통한 관직의 대량경질(엽관주의)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②③④ [O] 윌슨(Wilson)은 「행정의 연구」(1887)라는 논문을 통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부패 등을 초래한 엽관주의를 버리고 정치로부터 행정을 독립시켜 능률적 행정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 2017 비전행정학 p.54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이 발생한다.
-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옥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②

해설> ② [O]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는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조직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① [X]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은 지나친 ‘분업’으로 발생한다.

③ [X]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난다. 할거주의(割據主義, 국지주의)는 관료들이 자기의 소속기관 · 소속부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므로써 횡적인 조정 · 협조가 곤란해지는 것을 말한다.

④ [X]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동조과잉현상’이 나타난다. 번문옥례(繁文縟禮, Red Tape)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문서다작주의(Red Tape)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관료제의 역기능(병폐)
(1) 동조과잉(→ 목표전환) 관료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인 규칙 · 절차에 지나치게 영합 ·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목표전환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Merton),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위주의 관리를 가져올 수 있다(Gouldner). (2) 번문옥례(繁文縟禮, Red Tape) · 형식주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는 문서다작주의(Red Tape) ·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3) 인간성의 상실 법규위주의 지나친 몰인간성(impersonalism)은 조직 내의 인간적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4) 전문화로 인한 무능 전문행정가는 이른바 훈련된 무능현상(Trained Incapacity,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인다)

것)을 나타냄으로써 시야가 좁아져 포괄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게 되고, 할거주의나 국지주의를 초래하기 쉽다.

(5)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계층제에 의한 지휘 · 명령에 의존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적극적 · 쇄신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선례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6) 할거주의(割據主義, 국지주의)

관료들이 자기의 소속기관 · 소속부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횡적인 조정 · 협조가 곤란해 질 수 있다(Selznick).

(7) 변동에 대한 저항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 · 현상유지적 특징을 나타내고 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결여될 수 있다(Bennis).

(8) 관료독선주의

직업관료는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독선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9) 민주성 · 대표성의 제약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이 약화되면 행정의 자율성이 지나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관료제의 대표성 ·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

(10) 무능력자의 승진(Peter의 법칙)

Peter의 법칙은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조직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되풀이되는 승진으로 공무원이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의 팽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1) 관료제국주의(Parkinson의 법칙)

Parkinson의 법칙은 관료제는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관료제는 권한행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 하는데, 이를 '관료제의 제국주의'라고도 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575

[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 ④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1881년 선거공로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부여받지 못한 엽관운동가(Guiteau)에 의한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의 암살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충격과 함께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었다.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직의 개방과 정치적 책임의 구현이라는 미국식 민주

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권교체에 따른 대량의 공직경질을 내용으로 하는 엽관주의를 공식 인사제도로 채택하였다.

▶ 2017 비전행정학 p.772

[5]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③

해설> ③ [X]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수입대체경비 등이 있다.

<고전적 예산원칙과 예외>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과정과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	신임예산, 국방비·정보비 등
명료성(명확성)의 원칙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총괄(총액)예산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의회)에 의하여 예산이 미리 의결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전용, 대통령의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등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	예비비, 전용, 불용액 등
한정성(한계성)의 원칙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 전용 등
	양적 한정성(계상된 금액 내 집행)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등
	기간 한정성(회계연도 독립)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지출 등
통일성의 원칙(국고통일의 원칙)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國庫)에 통합,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금지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수입대체경비 등
단일성의 원칙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 가급적 단일회계 내에 정리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등
완전성(포괄성)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에 계상, 예산총계주의	순계예산, 기금, 현물출자(現物出資), 전대차관(轉貸借款), 수입대체경비 등

▶ 2017 비전행정학 p.987

[6]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017 비전행정학 p.1333

[7]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비교행정론은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국의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는 이론'을 말한다.

- ③ [X] 비교행정론은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기능이라는 공통적인 변수를 통해 비교하고 설명함으로써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비교행정론의 평가
(1) 공헌 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 :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기능이라는 공통적인 변수를 통해 비교하고 설명함으로써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② 신생국 행정연구에 기여 : 미국 행정학의 한계를 밝혀 줌으로써 후진국에서의 토착적 행정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③ 기 타 : 공식적인 법규가 아닌 실제의 운영상태를 중심으로 비교·연구하였다(구조기능주의 시각).
(2) 한계 ① 정태적 이론 : 비교행정론 역시 체제론과 마찬가지로 구조기능론적인 입장에서 균형을 중시하므로 정태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의 사회변동기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비관론 : 모든 것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숙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③ 행정의 종속변수성 : 독립변수로서의 창조적 엘리트에 의한 행정혁신과 발전의 유도가능성을 간

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1960년대에 불균형이론인 발전행정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④ 기 타 : 후진국의 실정에 맞는 실천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 2017 비전행정학 p.90

[8]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의 관여 정도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정답> ②

해설> 메이(May)는 논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와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에서 A는 외부주도형, B는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 C는 굳히기형, D는 동원형에 각각 해당한다.

② [X] B의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의 경우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경우로써 정책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는 모형이다.

<메이(Peter J. May)의 의제설정모형(1991)>

대중의 관여 정도 (대중의 지지)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논쟁의 주도자)	높음	낮음
민간(사회적 행위자)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
정부(국가)	굳히기형	동원형

▶ 2017 비전행정학 p.305

[9]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기본급여의 연액만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한다.

우리나라 연봉제의 종류
(1) 고정급적 연봉제 ① 기본급여의 연액만을 기본연봉으로 지급(직책, 계급, 누적성과) ②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용
(2) 성과급적 연봉제 ① 기본연봉 외에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기준액의 7% 범위 내의 성과연봉을 추가로 차등 지급 ②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① 기본연봉(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과 성과연봉(성과연봉기준액의 18%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을 지급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

▶ 2017 비전행정학 p.897

[10]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국민감사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하도록 되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953

[11]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진입규제 강화

- ② 바우처 제공
- ③ 정부계약(contracting out) 활용
- ④ 공동생산(co-production)

정답> ①

해설> ① [X]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규제와 같은 정부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 2017 비전행정학 p.255

[12]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 |
|---------------|-------------|
| ㉠ | ㉡ |
| ① 장 | 관, 항, 세항, 목 |
| ② 장, 관 | 항, 세항, 목 |
| ③ 장, 관, 항 | 세항, 목 |
| ④ 장, 관, 항, 세항 | 목 |

정답> ③

해설> ③ [O] 이용(移用)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인 세항, 목 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한다.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구 분		이용(移用)	전용(轉用)
공통점		①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특히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 ② 사후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차이점	내 용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상호융통(사업 내용 · 규모의 변경)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상호융통(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
	국회 의결	필요(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불필요(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 2017 비전행정학 p.1088

[13]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진빠기 결정
-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④ 갈등의 준해결

정답> ④

해설> ④ [X]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연합모형)의 내용이다.

①②③ [O]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혼란상태)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2017 비전행정학 p.361

[1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O]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국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② [X] 세외수입은 지역 간 · 연도별 분포 상황 및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불균등하다. 그리고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③ [X]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다(2015).

④ [X] 국고보조사업에 일부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등보조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획일적 보조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1299, 1295, 1296

[1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규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231

[16]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정답> ①

해설>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조직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X]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갈등의 원인 중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
(1) 개인적 차이 ① 가치관의 차이 : 종교의 차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 ② 인지 및 태도의 차이 : 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 ③ 성격의 차이 : 성격 차이로 지각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조직구조상의 요인 ① 수평적 분화와 업무의 상호 의존성 : 하위 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② 순차적·교호적 상호 의존성 : 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

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③ 제로섬(zero sum) 상황 : 자원들에 대해 타인들과 경합 상태에 있을 때
- ④ 역할이나 관할 영역의 모호성 :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⑤ 평가기준과 보상체계에서의 상이성 : 고객에 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에 의해 평가받는 판매 관리자와 비용의 극소화에 의해 평가받는 생산부서 관리자 간의 갈등
- ⑥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 :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기회가 허용됨에 따라 갈등 증폭
- ⑦ 지위 · 신분상의 불일치(지위의 부조화) : 지위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⑧ 전문화 : 인간의 전문화와 작업의 전문화는 편협한 시각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
- ⑨ 비공식적 조직의 온존 : 비공식적 조직은 배타적인 멤버십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

▶ 2017 비전행정학 p.669

[17] 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 ④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지식의 축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방법에는 감수성 훈련, 영화, 회의, 시범, 연기, 전보, 토의, 사례연구 등이 있다.

<훈련의 목적에 따른 훈련방법의 유형>

훈련의 목적	훈련 방법
지식의 축적(습득)	독서, 강의, 시찰, 토의, 사례연구
기술의 연마	견습, 시범, 연기, 전보, 토의, 사례연구
태도·행동의 변화	감수성 훈련, 영화, 시범, 연기, 전보, 토의, 사례연구,

▶ 2017 비전행정학 p.846

[1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 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 ②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정답> ③

해설> ③ [X]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정책실시전후비교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써 비실험적 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451

[19]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 \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B
직접적	C	D

-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답> ④

해설>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수직적 차원에서 강제력의 적용이 직접적(immediate)인가 간접적(remote)인가에 따라 나누고, 수평적 차원에서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인가 행위의 환경인가에 따라서 나누었다. 설문에서 A는 분배(배분)정책, B는 구성정책, C는 규제정책, D는 재분배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 ④ [X] D의 재분배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수준에서 집권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Lowi의 정책 유형 구분>

구 분		강제력의 적용대상(강제력의 적용가능성)	
		개인의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간접적(원격적)	분배정책(19C 토지정책)	구성정책(선거구조조정)
	직접적(즉시적)	규제정책(과대광고규제)	재분배정책(사회보장)

▶ 2017 비전행정학 p.282

[20]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③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 -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정답> ④

해설>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 RTB) 모형은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의사결정모형을 말한다.

④ [X] 설문은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산 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real time budgeting : RTB)>

흐름	개념	정치적 특징	관심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설득의 정치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선택의 정치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예산의 기술적 추계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제약조건의 정치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
예산 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범위?	책임성의 정치	집행의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기술적 성격이 강함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결정권한의 균형